

다산포럼

제러미 코빈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유럽 중도좌파 정당들이 일제히 쇠락의 길에 들어서 시점에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68·Jeremy Corbyn) 당수가 진보정치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빈은 1983년 총선을 통해 하원에 발을 들인 이래 34년 동안 런던 이즐링턴 노스에서 내리 9선을 했다.

그는 처음 집권당 의원이 됐던 1997년 이후에만 530여 차례 당론을 거역했던 ‘상습적 반란자’였다. 만년 평의원(back-bencher) 신분을 스스로 고집했거니와, ‘거룩한 바보’가 따로 없는 셈이다. 그가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은 오히려 거리였는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보통사람들 틈에서였다.

코빈이 2015년 노동당의 총선 패배 직후 전직 당수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지도부 구성에 관한 권력이 원내에서 당원과 활동가 중심의 원외로 급작스럽게 이전한 덕분이다. 그 전해에 노동당은 당수 선출 방식을 의원들이 1/3 권한을 행사했던 선거인단 제도에서 일인일표제

로 바꿨고, 비당원도 3파운드(지금은 25파운드)만 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빈이 당권 경쟁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당원 수십만 명이 늘었고 당 밖에서 수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두 차례, 코빈은 압도적으로 당수에 선출되었다.

영국 정치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것처럼 적게,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많게 지지받았던 당수는 없었다. 의원 80% 이상이 등을 돌렸고 예비내각 각료들의 사임이 줄을 이었다.

진보 언론인들은 하나둘 지지를 철회했고, 주류 언론의 일상적 폄하와 조롱 가운데 여론조사에선 거의 모든 연령층, 계층, 지역에서 보수당이 앞서는 상황이 지속됐다. 보궐선거 패배가 잇따랐으며 노동당이 영리한 야당으로 추락하리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이 모두가 ‘실익은 사회주의자’ ‘가장 무책임한 당 파괴자’, 코빈 탓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탈진해서 소멸해 주길 원했다. 과반 의석의 불과 5석 초과로 힘겨워하던 메이 총리가 서둘러 조기총선을 발표한 것이 이상현에서다.

두 당의 지지를 격차 21%는 1983년 이래 최대였다. 메이는 EU와의 협상에서 ‘강한 브렉시트’(관세동맹과 단일시장 모두 탈퇴)의 성공적 관철을 위한 보다 확실한 ‘위임’을 원했다. 선거 압승이 필요했고 이참에 노동당은 궤멸돼야 했다.

우익 언론의 성원 속에 메이의 인기는 치솟았고 보수당은 유례없이 단결했다. 코빈 ‘에피소드’는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코빈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거나 사회주의 신념을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담대했고 집요했으며 구호는 단 순했다. “중도사민주의는 끝났다. 체제를 변혁하기보다는 관리하려 했기 때문이다.” 노동당 선거경쟁에 담긴 정책들(대학등록금 폐지, 보편적 무상급식, 철도와 우편 등 재국유화,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은 진지했고, ‘나토 탈퇴와 일방적 핵비무장’의 포기를 공약함으로써 상대 진영의 안보장사를 선제할 정도로 실용적이었다. 이런 약속들은 마르크스주의보다 케인스주의에 훨씬 친밀했으나, 코빈을 위협한 극좌파며 범석을 떨었던 일도 실은 영국 사회가 얼마나 깊게 신자유주의에 침윤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청년들이 투표소로 물리면서 투표율이 급등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모두가 경악했다. 노동당은 30석을 늘려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262석을 얻었고, 10% 증가한 득표율 40%는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13석을 잃고 과반마저 상실한 보수당은 군소정당인 북아일랜드 DUP(민주통합당)의 양해 하에, 아슬아슬하게 정권을 꾸려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요컨대 선거는 패했지만 코빈은 승리했

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청년들은 투표를 꺼리고 정책 유세는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영국 정치에 대한 전통적 가정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진보 언론이 돌아왔고, 동료의원들이 모여들었으며, 코빈은 차기 총리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코빈은 영국 사회주의를 회색시켰는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사회주의가 침체의 늪에 빠진 영국 노동당과 영국 민주주의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강한 야당이 없으면 어떤 정부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 1804~1881, 정치가·작가)의 경고다. 대처 정부는 대처 혁명의 상승세 속에서 인두세를 밀어붙이다 좌절했고, 잇단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던 블러 정부는 재앙을 맞았으며, 노동당을 항구적 불구로 만들려는 메이의 시도는 코빈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았다. 모두 여론의 흐름을 과신한 오만이 빚은 참사였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정권은 종종 스스로 최악의 적이 된다. 통탕통탕 다가온 여론은 또 그렇게 달아나는 법이다. 야당이 빈사상태면 억지로라도 일으키고 살려야 한다. 그해야 민주주의도 산다. 사안의 경중에 민감하되 100%를 모두 취하려는 짓은 어리석다. 자국의 한국 정치가 격정되는 지점이다. 케인스의 말을 빌리면, 변영은 언제나 누적적으로 온다.

교단에서

블라인드나 선착순이나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감

‘선착순’ 하면 군대나 신상품 첫날 또는 마트의 사은품을 따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군복무 시절 소대장 기분이 언짢으면 지정된 목표물을 돌아오는 선착순을 시키는데 꼭 1등만 열외를 시키고 다시 돌린다. 두 번째 돌 때, 첫 번째의 2등은 지쳐서 못 달리고 적당히 달렸던 친구가 1등을 한다. 어떤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꼴등을 작성하고 슬슬 달리기에 대책이 안서는 벌이 선착순이다. 한정 판매 신제품을 사기 위해 선착순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이나 간고등어 100마리를 선착순으로 받기 위해 북적거리는 마트의 광경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이미지의 ‘선착순’으로 사원을 뽑는 회사가 있다.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 기업에 대한 연구와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를 통

해 알게 된 회사다. 십 수년을 일본에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그가 펴낸 ‘괴짜 경영학’은 세계적인 불황에도 호황을 누리는 행복한 중소기업 9개를 소개한 책이다. 책의 제호처럼 괴짜 같은 내용이 많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란 용어가 신선했다. 그중 소개하고자하는 기업은 ‘주켄공업’이다.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이지만 ‘100만분의 1그램’ 초극소형 톨니바퀴를 개발한 세계 최고의 정밀 가공 회사이다.

저자가 소개한 주켄공업의 두 가지 특징은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사원의 최대 행복 추구’와 ‘무시험 선착순 입사제도’이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속적으로 저성장을 바라는 회사는 처음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회사원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회사 목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다. 더더욱 기이한 것은 50년 가까이 시행해온 신입사원 선착순 모집이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따지지 않으니 중졸도 있고, 고교 중퇴자도 있고, 폭주족도 있고, 연산이 제대로 안 되는 소녀도 있었다. 학력도 안 보고 경력도 안 본다. 원서를 접수하면 ‘면접’이 아니라 ‘면담’을 하는데 지원자에 대한 질문은 없고, 회사의 급여

제도와 휴가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며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희망사항’을 듣는 것이 끝이란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뽑은 주켄공업 마쓰우라 사장의 인재육성법은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녀 차별이 없고, 학력 차별도 없다. 정년도 없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은 주켄공업. 이런 회사 분위기에 때문에 선착순으로 뽑힌 사원들은 2, 3년이 지나면 눈빛이 달라지고, 십 여 년 후부터는 세계적인 장인이 되는가 하면, 고교 중퇴자가 학회에서 발표뿐만 아니라 교수들 앞에서 강의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미분 적분을 모르는 이들이 입사해서 몇 년이 지나면 CAD의 달인이 되고, 미적분 공식으로 정밀기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특이한 사례여서 보편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채용방법 논의가 한창인 지금 의미 있는 사례이기에 소개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이 바뀔 모양이다. 편견을 막기 위해 블라인드를 친다고 한다. 사진, 학력, 출신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의 기록이 금지된다. 공공기관부터 바로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한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고립과 차단을 의미하는데 기회균등을 위해 장막을 친다는 것이다. 대체로 총론에는 찬성

하지만 각론에는 상반된 의견이 상존한다. 그래서 최선책이 아니라 교육책이다.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시행해 보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면 ‘블라인드 대입제도’로 확대되지 않을까 예견해 본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면접관과 수업 실연 평가자로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다. 심사하기 전에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전달받는다. 한번은 면접이나 평가할 때 웃지 말아달라는 애매한 부탁을 했다. 너무나 경직된 수험생들에게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밝은 표정으로 웃고, 고개를 끄덕여주곤 하는데 탈락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간혹 있다고 한다. 분명히 평가자나 면접관이 긍정적으로 반응했기에 불합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민감하다. 블라인드 채용은 면접이 관련건이다. 인공지능(AI) 면접관을 도입하는 의견도 있다.

7년 동안 겁받어 몸 비리고 머리까라까 지 뻘진 어느 취업준비생의 간절한 한마디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보는 것이 소원” 이란다. 이 시대의 큰 울음이고 진한 눈물이다. 블라인드 선착순이든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 고

도시의 고질적 문제 층간 소음과 빛 공해



문병재
광주시 환경정책과장

최근 환경 민원은 도심 밀집과 발달로 인해 소음, 먼지, 악취, 일조 피해 등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중 층간소음과 빛 공해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다.

층간소음 민원은 공동주택 증가에 맞춰 급증하는 추세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사 온 지 1년 만에 윗집 소음 때문에 병들었다는 할머니, 신혼집에서 거주한 지 두 달여 인데 윗집 소음이 너무 힘들다며 흐느끼는 젊은 여성, 낮에 피아노 치는 소리에 윗집 사람이 항의해서 힘들다는 노년의 남성 등등. 이들은 이미 관리사무소, 경찰서 등 여러 곳에 도움을 청했지만 해결이 안 됐고,

설상가상으로 상대방과 대면과정에서 앙금이 쌓여 극도로 민감한 상태라 상담조차 쉽지 않다.

우리 지역에서 지난 5년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상담한 사례는 1300여 건이며, 광주시에도 매일 2~3건씩 층간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상담전화와 오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2%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발소리이고, 마치질 4.1%, 가구를 끌거나 짚는 행위 3.3%, TV 등 가전제품 소리 3.2%, 악기 소리가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기 앞서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기본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자신이 소음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해 다른 집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소음은 받아들여야 한다. 내 집에서도 매트를 깔아 아이의 활동소리를 줄이고 슬리퍼를 신어 걷는 소리를 줄이는 등 기본예절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도를 넘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아파

트관리사무소와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먼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려 증재를 요청한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음이 계속 날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알려 분쟁의 조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구대(182)에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시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상담을 신청한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 진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해 피해자와 상대방, 관리소장 등에게 소음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율해준다. 필요하면 소음 측정도 해준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제시하는 제도로,

소음이 수차례 ‘수인한도’(뛰는 소리의 경우 야간 최고소음도 52dB(A))를 초과하는 등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배상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최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밤이 총총해야 할 밤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현란한 내문은 빛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광주에서는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가로등 등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건축물 등의 장식조명을 유도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불편을 느끼는 이들은 우선 구청 환경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社說

손가락 없는 산악인의 담대한 도전과 쾌거

만년설 뒤덮인 히말라야의 ‘하얀 산’은 산악인들에게 동경과 흠모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곳을 지배하는 폭풍설과 혹한 및 눈사태, 예고 없이 쏟아지는 돌무더기와 얼음덩어리, 곳곳에 도사린 크레바스(빙하의 갈라진 틈)는 도전자들을 추축 들게 하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죽음의 지대’를 넘어선 산악인들의 개척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일반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준다.

이 지역 출신 산악인 김홍빈(53) 대장이 지난 주말 ‘산중의 왕’ 낭가파르밧(8125m) 정상에 우뚝 섰다. 그는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11개좌 정상을 밟으면서 산악사를 새로 써 가고 있다. 가뭄과 폭염,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온 국민에게 한줄기 소낙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낭가파르밧은 셰르파들이 ‘길러 마운틴’이라고 부를 정도로 험한 봉우리다. 이번 등정은 특히 해발 7200m(제4

캠프) 이상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 다섯 이상 머물며 극한의 상황을 맨몸으로 극복해 낸 성과여서 값지다. 제4캠프에서 정상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7시간50분. 강풍과 화이트아웃(Whitout·폭풍설로 모든 것이 하얗게 보여 방향과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을 뚫고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사투(死鬪)를 벌였다고 한다.

지난 1991년 북미 매킨리(6194m) 단독 등반 중 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김 대장은 한동안 실의에 빠져 방황하다 스스로에게 등반이라는 구원의 손을 다시 내밀었다. 이후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올랐고 다음 목표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향해 중단 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제 남은 대상은 안나푸르나(8091m)와 가셔브롬 I (8068m), 브로드피크(8047m) 등 3개로 이르면 2~3년 내 대장정을 마칠 것이다. 장애인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의 담대한 도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으면 한다.

보건증 발급 검사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권 개념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아직 ‘을’의 입장에서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인식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에서도 나타난다.

식당과 제과점·유형업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항문 검사는 필수 코스다. 이 과정에 민망한 장면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자들이 남녀 구분 없이 줄을 서는 등 수십 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보건증 발부가 필요한 업소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형업소·제과점·위탁급식업 등 2만1863곳에 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만여 명에 달하는 이들 업소의 종사자들은 보건소에서 해

마다 1차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사선실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임상병리실의 ‘항문 면봉 검사’를 해야 한다. 문제는 항문 면봉 검사이다. 수검자가 면봉을 항문에 찔러 넣는 방식인데, 별도의 검사실이 없다 보니 남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가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성들은 검사 방식이 수치스러워 면봉을 수트룸을 묻혀 제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지난 1년 동안 질병 판정을 받은 사례도 없어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제 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라도 시간대를 달리 한다든지 함으로써 남녀 구분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 방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및 필리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1787년 연방헌법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당시 연방정부의 고위직 임명권을 대통령 또는 각 주(states)를 대표하는 상원에게 줄 것인가 논란을 벌이다가,

중양선거관리위원 3인 등 35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절충안을 선택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6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했다. 또 몇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청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장·감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이 청문 대상에 포함됐고, 2006년부터는 현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명할 고위직 중 인사청문회 대상은 52명이다. 이중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고위직

위 공직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과 국가관보다 흡집 내기식 ‘신상 털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고위직 인사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고위직 후보자의 과거 이력은 물론 부인고자 자녀 문제까지도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도입 20년이 다 돼 가는 우리 인사청문회도 이제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고칠 시점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